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워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2.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 촉구 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춘례 의원 외 46명
- 나. 제안일 : 2021. 11. 08.
- 다. 회부일 : 2021. 11. 16.
- 라. 의안번호 : 296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20년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10개국 중 가장 적게 재정지출을 풀었고, 그마저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간접 지원에 치중했음.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 서울 시민에게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로부터의 시민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다지는 일에 서울시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이 송 처 : 서울특별시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결의안은 전례 없는 세계적·국가적 재난으로 평가받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개인 차원의 효과적인 방역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여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자고 제안되었음.

2 결의안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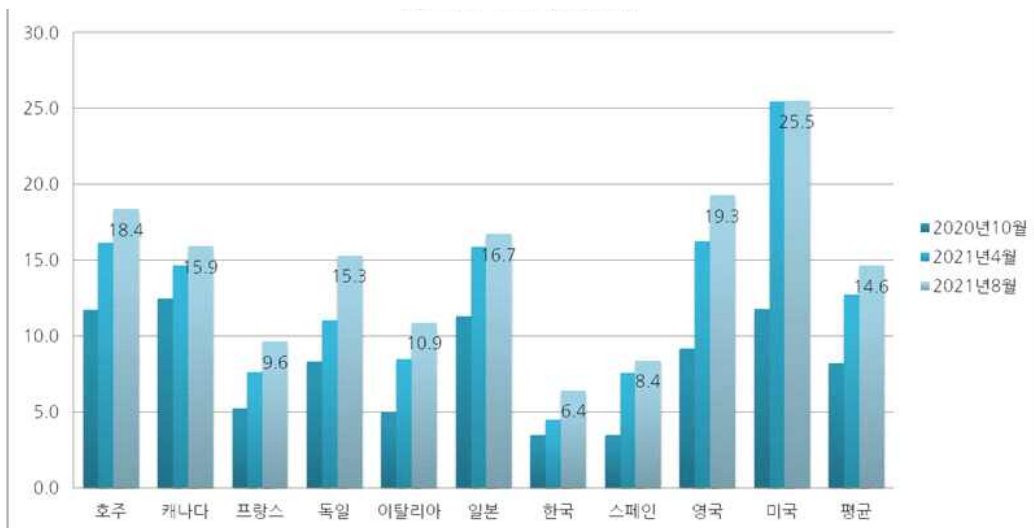
- 코로나19 감염병은 '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1년 12월 15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536,495명, 누적 사망자 4,456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음.
-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방역 안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국민안심병원 설치 등의 선진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 이후 다시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마져 발생해 감염병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
- 코로나19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뿐 아니라 전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쳤으며, 이는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비정규·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해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21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였고, 서울특별시도 '21년 본예산과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 긴급생존자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약 3조 5,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해왔음.

- 그러나 이런 정책실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예산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¹⁾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에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소속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음.
 - 같은 자료에서 한국과 20개 선진국 평균 간 격차는 '20년 10월 4.7% 포인트에서 '21년 10월 9.2% 포인트로 더욱 증가하였음.

<그림-1>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단위 : GDP 대비 지출 비중, %)



1)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한겨레 2021-11-09). 그 외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최소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진국 사례에 대한 소개는 “해외 선진국은 자영업자에게 ‘억대’ 코로나 보상을 했다”(경향, 2021-09-29) 참조.

-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의 국제 비교가 한국과 여타 선진국 간 감염병 확산 실태와 방역 실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추가 재정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고 재정 여력도 충분한 만큼,²⁾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코로나19 지원 예산의 집행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나타나고 있음.³⁾
 - 한편에서는 선별 지원이 대상 선정과 지원금 산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전국민 지원은 소비창출을 통한 경기진작과 그에 따른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민 지급의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기에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정부가 집행한 4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단 1차례의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만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크고,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와 방역지원·피해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서울특별시가 선도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및 여타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예산 규모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방역지원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통화기금의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총부채 비율과 순부채 비율은 주요 20개국 소속 선진 1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IMF Fiscal Monitor, 2021).

3) “경제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생각보다 커’(서울신문 2021-02-05), “재난지원금 효과 어땠길래?...‘전국민’ 지원 논쟁 다시 수면 위로”(한겨레 2021-02-07).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개인 차원의 효과적인 방역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의 심각성과 기존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의 미흡한 규모 및 최근 다시 급증하는 감염병 확산세에 비춰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됨.
- 다만, 전 시민 방역지원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여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